

여성기업 이슈 브리프

기업을 위한 일자리 창출 지원정책은?

발행인 | 한무경 발행처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발행일 | 2018년 08월 31일 주소 | 06224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221, 4층 홈페이지 | www.wbiz.or.kr

연구조사팀 윤아름*

CONTENTS

- 1. 배경
- 2. 국내 일자리 지원정책 현황
- 3. 해외 일자리 지원정책
- 4. 시사점

1. 배경

지난 17일 통계청¹⁾ 발표 자료에 따르면 청년실업률(15~29세)은 9.3%로 전월대비 0.3% 상승하였고 실업자는 7개월 연속 100만명을 넘어²⁾ 심각한 수준이다.

하지만 실업률³⁾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많은 중소중견기업 현장에서는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은행⁴⁾이 조사한 기업경기실사지수(BIS) 결과 제조업체들이 인력난 및 인건비 상승(14.5%)을 경영상 애로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월보다 2.2%p 상승해 2003년 이후 기업의 인력난 문제는 최고 수준이었다.

게다가 지난 7월부터 시행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기업들은 급여가 줄어든 인력마저 아직 제도가 적용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으로 빠져나가 신규인력 충원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⁵⁾

한편 이달 26일⁶⁾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임금인상에 따른 기업부담을 완화하고자 더 많은 일자리안정기금을 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차등화하여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본지에서는 국내외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 또는 인력을 지원하는 정책을 알아보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국내 일자리 지원정책 현황

최근 지속적인 청년고용 부진(전체실업률과의 격차 2배 확대)과 체감실업률이 20%⁷⁾로 지속상회 하면서 산업·교육·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일자리 수요부진과 미스매치가 지속되었기 때문이다.⁸⁾

* 연구조사팀 연구원 (aryoon@wbiz.or.kr, 02-369-0991)

1) 통계청 보도자료(2018.8.17), 「2018년 7월 고용동향」

2) 중앙일보, 하남현기자(2018.8.17.), "매달마다 '고용쇼크'...취업자 증가폭 1만명 선도 무너져"

3) 통계청 보도자료(2018.8.17), 「2018년 7월 고용동향」

주요국 실업률	한국	미국	일본
'17년 7월	3.4%	4.6%	2.8%
'18년 7월	3.7%	4.1%	2.5%(6월 실업률)

4) 한국은행(2018.7.31.), 「기업경기실사지수(BIS) 및 경제심리지수(ESI)」

5) 이투데이, 최두선 기자(2018.7.20.), "근로시간 단축에 경제 전망치도 하향.중소중견기업 "인력난 가중" 한목소리"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643698>

6) 경향신문, 김지환 기자(2018.8.26.),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에 일자리안정자금 더 많이 지원하는 안 검토"」

통계청 2018년 고용보조지표 3(%)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21.8	22.8	24.0	23.4	23.2	22.9	22.7

8)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8.3.15.), "청년 일자리 대책"



이에 올해 3월 대통령 주재 일자리위원회에서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확정·발표했고, 이와 관련하여 5월 21일 국회 예산이 통과되면서 정부는 취업청년의 소득주거자산형성 및 고용증대기업 지원 강화 등을 4대 분야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대상은 인력난의 미스매치가 심각한 중소·중견기업이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에서는 창업기업-성장기업-중견기업과 채용된 직원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내놓았다.

[표1] 기업 성장 단계별 일자리 지원정책

구분	주요 혜택
창업기업	<p>▶ 청년 1명을 채용할때마다 인력: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연900만원/3년</p> <p>▶ 기술창업 창업자 창업: 기술혁신형창업 오픈바우처 최대 1억원 (TIPS 10억원+POST-TIPS 20억원) 세제: 청년창업기업 법인·소득세 100%감면/5년 자금: 최대50억원+이자환급0.2%p (1인 고용시마다) 모태펀드 투자 15억원(창업초기 펀드 평균 투자금액)</p>
	<p>▶ 창업기업에 신규취업 청년 목돈마련: 내일채움공제 3,000만원/3년 (정부지원 연800만원) 세제: 근로소득세 90%감면→210만원/5년 주거: 전월세 저리용자 3,500만원 (연70만원 4년지원, 신규취업자)</p>
성장기업	<p>▶ 청년 1명을 채용할때마다 인력: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연900만원/3년 세제: 청년고용증대세제 최대 연1,600만원/3년 ※기본1,000만원 + 비수도권100만원(+10%) + 청년친화기업 500만원 ※세제개편(안) 국회통과시</p> <p>▶ 성장중인 유망중소기업 자금: 모태펀드투자 최대 30억원(일자리매칭펀드)</p>
	<p>▶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 목돈마련: 신규직원 3,000만원/3년 (정부지원 연 800만원) 기존직원 5,000만원/5년 (정부지원 연 360만원) 세제: 근로소득세 90%감면→210만원/5년 교통: 산업단지 교통비 210만원/4년 (18년.30만원, '19년이후 60만원) 주거: 신규직원 전월세 저리용자 3,500만원 (연70만원 4년지원)</p>

▲자료 : 고용노동부(2018.7.12.), "기업유형별 일자리 지원정책", 관계부처합동자료

중견기업	<p>▶ 청년 1명을 채용할때마다 인력: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연900만원/3년 세제: 청년고용증대세제 최대 연1,200만원/3년</p> <p>▶ 성장 잠재력 있는 중견기업 R&D+해외마케팅: 월드클래스 300프로젝트] 최대 연15억원/5년</p>
	<p>▶ 중견기업에서 일하는 청년 목돈마련: 신규직원 3,000만원/3년 (정부지원 연 800만원) 기존직원 5,000만원/5년 (정부지원 연 360만원)</p>

기업유형별 일자리 지원정책 혜택을 받는 기업 유형을 살펴보면 노동시간 단축기업, 고용위기 지역기업, 산업단지 중소기업 등이다.

[표2] 기업유형별 일자리 지원정책

구분	주요 혜택
노동시간 단축기업	<p>▶ 청년 1명을 채용할때마다 인력: 일자리함께하기 연960만원/2년 세제: 청년고용증대세제 최대 연1,500만원/3년</p> <p>▶ 기존 재직자 임금보전시 인력: 일자리함께하기 연960만원/2년 (신규채용 1인당 기존재직자 10인까지 지원)</p>
	<p>▶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 목돈마련: 신규직원 3,000만원/3년 (정부지원 연 800만원) 기존직원 3,000만원/5년 (정부지원 연 360만원) 세제: 근로소득세 90%감면→210만원/5년 주거: 신규직원 전월세 저리용자 3,500만원 (연70만원 4년지원)</p>

▲자료 : 고용노동부(2018.7.12.), "기업유형별 일자리 지원정책", 관계부처합동자료



9) 고용위기지역은 군산,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거제, 울산 동구, 영암, 목포 등 8개 지역이 해당됨

고용위기지역기업 ⁹⁾	기업	<p>▶ 청년1명을 채용할때마다 인력: 청년/청년추가고용장려금 연1,400만원/3년 비청년/지역고용촉진지원금 1,250만원/1년 세제: 청년/청년고용증대세 연 1,100만원/3년 비청년/고용증대세 연 770만원/3년</p> <p>▶ 고용위기지역내 기업 협력업체: 긴급경영안정자금 최대10억원 + 특례보증 최대 3억원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 최대10억원 + 복합청년몰조성 (저가임대)</p>
	직원	<p>▶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 목돈마련: 신규직원 3,000만원/3년 (정부지원 연 800만원) 기존직원 3,000만원/5년 (정부지원 연 360만원) 세제: 근로소득세 90% 감면→210만원/5년 주거: 신규직원 전월세 저리용자 3,500만원 (연70만원 4년지원)</p>
산업단지중소기업	기업	<p>▶ 청년 1명을 채용할때마다 인력: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연900만원/3년 세제: 청년고용증대세제 최대 연1,000만원/3년</p> <p>▶ 산업단지 소재 중소기업 주거: 공동주택임차비 360만원/1년/1인당 환경: 리모델링, 혁신성장촉진지구 신설</p>
	직원	<p>▶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 목돈마련: 신규직원 3,000만원/3년 (정부지원 연 800만원) 기존직원 3,000만원/5년 (정부지원 연 360만원) 세제: 근로소득세 90% 감면→210만원/5년 교통: 산업단지 교통비 210만원/4년 ('18년 30만원, '19년 이후 60만원)</p>

프랑스

프랑스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대표적인 기업지원정책으로는 대표적으로 고용촉진계약(Contrat Initiative Emploi, CIE)이 있다. CIE는 고용지원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기업지원 보조금 성격을 가진 지원정책으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촉진과 정책집행 이후의 안정적인 취업상태 유지에 효과적인 제도이다.¹¹⁾

[표3] 미국과 프랑스의 일자리 창출 기업지원정책

국가	정책	기업지원정책 주요내용
미국	WOTC	은퇴군인 또는 저소득 가정구성원, 장기 실업자 등 취업 취약 계층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을 고용한 경우 임금 지급액의 25% 또는 40%를 고용주 납부 세액에서 세액공제
프랑스	CIE	CIE제도는 프랑스의 실업 해결과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보조금제도로 고용주가 장기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사회보장기여금이 면제되는 혜택을 받음단, 임금은 프랑스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해야 함

이외에 고용률 상위국가의 고용정책 특징은 다음과 같다.

3. 해외 일자리 창출 정책

미 국 미국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고용창출세액공제(Work Opportunity Tax Credit, WOTC)가 있다. WOTC는 취약계층 등 대상자를 고용했을 경우 고용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1996년 도입되어 2014년 일몰되었으나, 2015년 12월 「세금인상방지법(the Path Act)」을 통해 2019년까지 일몰이 연장되었다.¹⁰⁾

10) 고용위기지역은 군산,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거제, 울산 동구, 영암, 목포 등 8개 지역이 해당됨

11) 미국 노동부 홈페이지 <https://www.doleta.gov>



[표4] 고용률 상위국가의 고용정책특징

구분	고용정책 특징
영국	<p>▶ 노동시장의 유연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고용평등규정을 통해 65세 의무정년제 폐지 - (2012년)부당해고 구제청구자격 근로연수 1년→2년으로 늘림 - (2012년)부당해고 심리를 기존 재판관1명, 노사출신 심사위원 2인으로 구성되었으나, 2012년 4월부터 재판관 단독으로 심리 가능하도록 허가 - (2013년)100명이상 근로자 정리해고 협의개시일 90일전→45일전으로 단축
독일	<p>▶ 하르츠(Hartz)개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속한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한 환경조성: 노동사무소를 고용센터로 변경하여 one-stop-shop로 기능전환, 사설 직업소개소 설치를 통한 실업자 임시직배치 등 지원 - 일자리 연결과 신규 고용창출: 저소득직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세금 및 사회보장세 면제소득을 325→500EUR로 인상, 실업자의 자영업 촉진을 위해 연25,000EUR까지 현행 19.9%세율을 10%로 정율 적용 - 고용보호완화: 04년부터 10인 이하 사업장에서 신규고용시 해고보호조항 적용 없이 기간제 계약 가능, 신규창업시 최장 4년간 임시직 근로자 사용 가능, 해고자 선정기준(근무기간, 나이 등)과 무관하게 회사에서 필요한 직원 고용 유지 가능 - 실업급여 축소: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55세미만 12개월, 55세이상 18개월로 축소, 장기실업자는 실업부조 월350EUR 지급
일본	<p>▶ 일자리 창출정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인상노력: 기업의 임금인상 촉진을 위해 소득확대촉진 세제확충 - 중소기업/소규모사업자 지원: 중소기업의 사업혁신·설비투자 지원·실사·임금인상 실시하는 사업주 우선지원 등 임금인상 제촉 - 비정규직의 경력상승·처우개선: 경력상승 조성금의 확충 등을 통한 정규직 전환지원·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업 능력 개발 시책 시행 - 생산성향상 및 인재육성: 기업의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지원, 중장기적인 경력형성 지원과 일·가정 양립 추진 환경정비 실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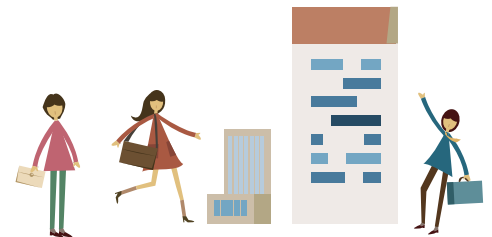
4. 시사점

지속된 일자리 문제로 인한 기업의 경영악화 논란 속에 이달 22일 정부와 여당은 당장 협의를 개최¹²⁾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등 7조원 수준의 직접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경영난을 해소하는 데 일부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있지만, 최저임금으로 늘어난 인건비 부담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아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¹³⁾

물론 일자리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대책,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하는 임금보조지원과 신규채용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지원정책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내년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은 임금지불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영세 자영업자와 저임금 중소기업의 고용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와 같은 임금보조 정책보다 더 근본적인 정책을 위해 정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여성기업 이슈 브리프(제 18-07호)'는 여성기업종합정보 포털 사이트(<http://www.wbiz.or.kr>) 자료실에서 파일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호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연구진)의 견해이며,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호의 내용은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 고용노동부(2014), 「선진국 고용정책의 일자리 창출 효과연구」

12)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2018.8.22),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

13) 동아일보, 이은택 기자(2018.8.23), "자영업자 환영 못받은 자영업 7개 지원 대책"